

## 트럼프 2.0, 한반도의 미래는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졸저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에서 발췌해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엇갈림?

트럼프의 귀환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화 없는 남북 관계의 안정화’와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북미 정상회담 프로세스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및 촉진 역할에 사의도 표하고 기대도 했지만, 기대를 접은 이후부터는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따라서 윤석열 이후의 한국 정부가 북미 관계 중재와 촉진에 나서려고 하면 조선은 ‘끼어들지 말라’라고 하거나 아예 무시할 것이다.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이라는 채널이 필요했던 ‘시즌 1’ 때와는 달리 ‘시즌 2’에서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다. “러브 레터”로 불렸던 정상 간의 친서 외교를 재개할 수도 있고, 특사 교환, 제3국에서의 접촉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대화의 방정식이 바뀌었다는 데에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래 2019년까지 대화를 원한 쪽은 조선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에 호의적일 때 한국의 중재와 촉진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조선은 묵묵부답이었다. 만약 2기 트럼프 때 북미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미국의 제안과 조선의 수용이라는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이 미국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조선에 북미대화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역할이 아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한미 동맹과 한미 공조라는 틀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 북미대화 재개의 분위기와 조건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한미(일)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자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트럼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기 한국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북미대화 재개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 표명의 수위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북미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성과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가 조선의 핵무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는 물러설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입구’나 ‘중간 단계’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기적으로 비핵화 달성은 물론이고 협상조차도 불가능해진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선先비핵화’ 노선을 고수할수록 북미대화에서 소외될 공산도 커진다. 설사 비핵화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더라도 북미 대화는 희박해지고 북핵 고도화는 선명해질 것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한반도 안보 불안의 상시화로 이어져 한국이 입게 되는 안보적·경제적·외교적 이익 훼손을 수반하게 된다. 트럼프가 동맹을 ‘거래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는 비핵화를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를 ‘출구’ 쪽에 두는 것이다. 2기 트럼프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공산은 크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비핵화는 끝났다는 조선의 입장과 여전히 거리가 멀고,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끝으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비핵무기시대(비핵시대)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여러모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는 금지어인 반면에, ‘비핵시대’는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접근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귀환을 계기로 북미 관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폭망한 남북 관계는 한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남북 관계 악화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남북 대화와 협력이 쉽게 복원되기 어려운 경험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조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 관계의 유무형의 연결 고리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다. 대남 부서와 관련 법·제도를 없앴고, 대표적인 남북경협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재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었다. 남북 협력과 교류의 통로였던 경의선·동해선도 폭파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방어벽을 세워 군사 요새로 탈바꿈시켰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탈남조선’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남북 관계의 적대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무인기 파동, “자유의 북진” 통일론, 한미(일)연합훈련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강화,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등 윤 정부 시기에 이뤄졌던 대북 강경책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도 대남 오물 살포 및 대남 괴음 방송 중단 등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집권기에 언제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만 되어도 한시름 내려놓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차기 한국 정부 임기 중의 남북 관계는 ‘대화 없는 안정화’로 흐를 공산이 크다. 다시 친해질 수는 없지만 싸우지는 않는 관계가 될 거라는 뜻이다. 하지만 관계 개선 없는 안정화는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 그래서 설자리를 잃어버린 기존의 대북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대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책

을 토론하고 설계해야 한다.

## 2. 트럼프의 ‘코페르니쿠스적 비핵화’?

“만약 우리가 핵무기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도까지 많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규모는 더 작지만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3대 핵보유국들인 러시아·미국·중국(핵무기 보유량 순)을 가리킨다. 트럼프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확실히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날인 1월 20일에 한 발언을 반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의 비핵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나 핵군축을 염두에 두면서 북핵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를 법한 일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은 자국의 핵무기 정책이나 전략에는 손을 대지 않고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만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나 핵군축에 함께 나서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대선 유세 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비핵화’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딱 한번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러·중 등 강대국들이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나온 발언인 것이다. 그리고 3월 13일 발언은 미·러·중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을 포함한 다른 핵보유국들도 세계의 비핵화나 핵군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그는 이란의 최고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내 핵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여러 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 3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략무기의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두 정상은 글로벌 안보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협력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양측의 발표에 온도가 차이는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축소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러한 발제가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급변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면서 미·중·러 중심의 다극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안보의 경제성’은 열쇠 말에 해당한다. 미국 자체적인 국방예산 감축과 동맹·우방을 상대로 한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는 그 일부분이다. 더 큰 야심은 세계 3대 핵보유국이자 군비 지출 국가인 미·중·러가 핵군축과 대규모의 군사비 삭감을 단행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군비경쟁형 세력균형’이 아니라 ‘군축형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미국의 군비 부담을 크게 줄여보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또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갖고 있다. 세계 핵군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도 이와 맞닿아 있다. 오바마는 취임 첫해인 2009년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노벨평화상을 ‘선불’로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오바마의 성적은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후반에는 1조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승인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바마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는 취지에 발언을 해왔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내가 세계 핵군축에 이정표를 세워도 안 줄 테냐’는 야심이 파리를 틀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왔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에 갇혀 김정은과 만나지도 전화통화도 못했고, 그 결과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도 2017년 1월에 백악관 열쇠를 트럼프에게 넘겨주면서 “미국 국가안보의 최대 난제는 북핵 문제”라고 얘기해줬을 정도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났고 “러 브레터”도 교환했다고 자랑해왔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친분을 거듭 과시하면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불러줄 테니 세계 핵군축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듯 트럼프의 비핵화 노선은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 한다. 이는 한국과 조선 모두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는 트럼프의 군축 노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이 관성에 머무르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같은 트럼프의 청구서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트럼프의 핵군축 야심에 막혀 말도 꺼내기 힘들어질 것이다.

김정은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도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1기 트럼프 초기에는 경제제재와 무력시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기 트럼프는 ‘친분을 통한 최대의 압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제에는 김정은과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계의 비핵화나 핵군축은 조선의 오래된 화법이다. 조선은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은 핵군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화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핵보유를 정당화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중·러, 특히 미국이 술선수범을 보이면서 조선의 동참을 요구하면 이는 ‘공감을 통한 압박’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김정은은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며, “전략 국가”를 강조해왔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지는 게 그 핵심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세계의 전략 문제, 특히 핵군축이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이를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간주할 수 있다. 조선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받았던 처지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 문제를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이 2월 18일 외무성 담화에서 “북한 비핵화”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여지조차도 두지 않았다가 트럼프가 돌아오자 조건을 환기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내년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아우르는 5개년 계획을 올해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열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대미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전략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트럼프로서도 올해는 러-우 전쟁 종결과 그 이후 미중, 미러, 미중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군축과 국방비 축소를 추진하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타진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불가’가 고수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세계 비핵화론’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나고 있다.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은 없을까? 나는 한반도나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비핵지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은 비핵화가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비핵지대는 실천적·개념적으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 핵전쟁의 위험이 큰 한반도나 동북아를 비핵지대화하는 것은 트럼프의 핵군축 노선에 어울리는 의제가 될 수 있다.

### 3. 비핵지대가 뭐길래?

그럼 비핵화와 비핵지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실 차이를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이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자신의 핵무기 포기뿐만 아니라 미국 핵위협을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했다. 반면 미국은 자신의 핵정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라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다. 이러한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중요한 원인이었다.

반면 비핵지대의 정의는 보다 분명하다. 비핵지대는 핵무기 및 핵 위협이 없는 상태가 구현되는 지역 혹은 지대를 일컫는다. 이에 기초해 유엔 군축위원회는 1999년 비핵지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같은 해 유엔총회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해당 지대 내 핵무기의 부재, 즉 핵무기의 개발, 제조, 실험, 보유, 배치, 접수, 반입 등을 금지”하는데, 이는 지대 내 국가들의 의무 사항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비핵화와 흡사하다. 그런데 비핵지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둘째로 5대 공식 핵보유국들이자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상임이사국들인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가 소극적 안전해당 지대 국가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을 안한다는 소극적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해당 지대에는 핵무기 배치도 금지한다는 핵보유국들의 의무도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지대의 경우 지대 내 국가들의 조약뿐만 아니라 5대 공식 핵보유국들의 의정서 체결도 의무이다. 그리고 셋째는 “조약 체결국들은 조약 준수 기구를 설치해 조약 이행 준수를 감독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비핵지대 조약은 회원국의 탈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춰볼 때,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은 한국과 조선이 지대 내 당사자로 체결국이 되고 5대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에 서명·비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지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생산·보유·실험·접수하지 않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또 핵보유국들은 한국과 조선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한다.

이처럼 비핵지대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합의된 정의가 존재한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비핵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면 당사국들은 비핵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의 정의와 목표를 핵문제의 해법으로 삼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윤석열 이후의 정부가 비핵지대를 연구·토론·공론화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비핵지대와 관련해 풍부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일본 등 국제사회를 향해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도 참여하는 ‘동북아 비핵지대’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핵은 갖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국시国是로 견지해왔다. 또 일본 내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 논의가 비교적 풍부하게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 일본을 지대 내 당사자로 하고, 5대 핵보유국들이 의정서 체결 형태로 참여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논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먼저 체결하고 추후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조선이다. 핵무력법과 헌법에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이러한 지위를 대외적으로도 다져온 조선이 비핵지대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군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군비 통제가 비핵지대로 가는 가교이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핵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시야에 넣으면서 긴 안목을 가지고 비핵지대 방식을 추진하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